

OECD DAC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OECD DAC 동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논의되는 최신 개발협력 동향을 비롯하여 DAC 주요 회원국 및 원조기관의 개발원조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매 분기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에서 작성·배포합니다.

I. Development Issue

1. OECD DAC 2016년 5월 정례회의 주요 결과 (2016. 5. 20)

II. DAC 회원국 및 원조기관 동향

1. 호주 원조예산 삭감
2. 프랑스 AFD-CDC 합병 백지화
3. AIIB 프로젝트 추진 동향

III. OECD DAC 3/4분기 일정



I. Development Issue

1. OECD DAC 5월 정례회의 주요 결과 (2016. 5. 20)

- ◇ OECD DAC은 2016년 5월 20일, 파리 OECD 본부에서 5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 차기 DAC 의장 선출, DAC 혁신을 위한 고위급 패널 설치, 민간부문개발 심화방안, ODA 수원국 선정기준 검토요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

가. 개요

- OECD DAC은 2016년 5월 20일, 파리 OECD 본부에서 5월 정례회의를 개최
 - ※ DAC 정례회의는 DAC 의장 및 회원국 대표, OECD 개발협력국(DCD)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정기 월례 회의로서, DAC의 주요 개발협력 이슈를 공유 및 논의

나. 주요 결과

(1) 차기 DAC 의장 선출

- (배경) 에릭 솔하임 (Erik Solheim) 現 DAC 의장이 UNEP 사무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차기 DAC 의장 선출 이슈가 부상
 - 사무국은 5.19(목), OECD 사무총장 명의 서신을 각 회원국에 발송
 - 당 서신에는 각 회원국에게 조속한 의장 후보 지명 완료와 함께, '파리 본부 상근 수행'이라는 현 의장직 근무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최적 후보를 지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
- (논의) 회원국들은 DAC 의장 선출, 근무조건 결정 등이 회원국의 고유 권한인 바, DAC 사무국이 당 서신을 개발협력국장 (DCD Director)이 아닌 OECD 사무총장 명의로 보낸 것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이에 대하여 마리오 페지니(Mario Pezzini) 개발협력국장 직무대행은 OECD 내부 절차와 관행을 검토하여 당 서신을 발송했다고 해명

- **(결과)** 솔하임 의장은 차기 DAC 의장 선출 및 근무조건 결정 등이 회원국의 고유 권한임을 회원국에 재확인

※ 6월 말 현재 스웨덴(Ms. Charlotte Petri Gornitzka 現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청장)과 벨기에(Mr. Peter Moors 現 벨기에 개발협력장관 비서실장)가 의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7월 중 후보에 대한 DAC 인터뷰 및 내부 선거로 차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

(2) DAC 혁신을 위한 고위급 패널 설치

- **(배경)** 회원국들은 SDGs 채택, 신흥공여국 등장 등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을 선도할 DAC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DAC 혁신안을 제시할 고위급 패널(이하 DAC 혁신 패널)을 설치하는 데 합의 (2016년 2월, HLM)

- **(논의)** 솔하임 의장은 현재 패널 구성을 위하여 다수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 중이며, 출신 지역·전문 분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패널 규모를 10~15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결과)**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패널운영안에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DAC 혁신 패널 구성에 대한 DAC 승인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

※ 동 패널은 2016년 12월까지 DAC 혁신안을 담은 패널 보고서(Panel Report)를 완성하여 2017년 DAC 각료급회의(HLM)에 제출할 예정

- OECD 사무국 인사의 패널 참여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은 패널 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 표명

(3) 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심화방안

- **(배경)**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부문개발(PSD)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무국은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현황분석 및 지원규모 측정 방식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

- **(논의 1)** 현황분석 결과, 공여국은 다양한 금융수단(대출, 지분투자, 보증 등)을 통한 민간기업 앞 직접지원,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민간부문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을 지원 중

- **(분야)** 민간부문개발의 정책분야(Policy Area)는 크게 투자환경 조성 (Investment Climate)과 생산역량 개발(Productive Capacity)로 분류 가능

- 공여국 지원형태 분석 시, 양자협력은 주로 생산능력 개발 분야 사업에, 다자협력은 주로 투자환경 조성 분야 사업에 주력하는 경향

- (과제) 지원전략 및 제도의 정합성 강화, 민간기업 앞 직접지원 시 공여국 이익과 개발목적성 간 상충 가능성 극복 등이 향후 주요 개선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사무국은 향후 다양한 정책분야를 분석하여 지원전략을 도출할 계획임을 시사

< 민간부문개발 정책분야 >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	투자환경 조성 (Investment Climate)	거시경제 안정 (Macro-economic stability)
		경영환경 조성 (Business Environment)
		통상정책 수립 (Trade Policy)
		노동시장 지원 (Labor Markets)
		기반시설 구축 (Infrastructure)
		금융서비스 지원 (Financial Services)
	생산역량 개발 (Productive Capacity)	경제적 고도화 (Economic Upgrading)
		가치사슬 개발 (Value Chain Development)
		기업 성장지원 (Enterprise Development)

출처 : OECD (2016), Development Co-operation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alytical Framework and Measuring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DCD/DAC/AGID(2016)1/REV1

- (논의 2) 측정방식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민간부문개발 사업을 분석하여 OECD 통계시스템 원조목적·분야 코드(CRS Purpose·Sector Code)를 활용한 각 정책분야별 지원규모 측정체계 틀 마련
 - (한계) 원조목적·분야 코드가 민간부문개발 측정을 위하여 고안된 지표가 아닌 만큼 정확한 지원규모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여, 해석상 주의가 요구됨.
 - 민간부문개발 사업은 개도국 민간부문 경제성장·빈곤감소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목적(multi-purpose)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어, 단일 원조목적·분야 코드로 사업을 정의하기가 곤란
 - 특정 원조목적·분야 코드의 경우 측정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 개별 사업을 측정하기에 곤란
- (결과) 다수 회원국은 사무국 보고서가 시의적절했음을 밝히며, 향후 민간부문개발 심화방안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 향후 연구주제에 있어, 민간부문개발 - 개발효과성(일자리, 소득, 지속가능성 등)의 연계 분석, 추가성(additionality)과 시장왜곡, 소수집단(여성 등) 등이 제안됨.
- 또한 측정방식에 있어, 통계작성반과의 협업을 통한 측정방식 검토 및 확인, 기술협력 - 금융협력 간 차별화된 측정방식 도출, 중견기업과 소기업 지원의 개발효과성 분석 시 차별화된 측정방식 도출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4) DAC 수원국 판정기준 검토 요청

- (배경) DAC는 매 3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ODA 수원국 목록을 갱신
 - 이 때, 세계은행(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가분류체계에 따라 3년 연속 고소득국가군(High Income Countries)으로 분류된 국가는 수원국 목록에서 제외
 - 차기 갱신 시점은 2017년으로, 3개국(칠레·우루과이·안티구아바부다)이 수원국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
- (논의) 3개국 외교장관이 현 DAC 수원국 판정기준의 검토를 요청하는 비망록(Aide Memoire)*을 작성하여, DAC 사무국 앞으로 송부
 - * 공식 외교문서 중 하나로, 한 나라의 대표가 외교 사안에 관한 자국 의견을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 발언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
 -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원국 판정기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논의 완료 시까지 현 기준에 따른 ODA 수원국 목록 갱신을 보류할 것을 제안
 - 현재 DAC는 1인당 GNI를 ODA 수원국 여부를 판정하는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AAA)* 등 최근 국제사회 흐름과 상반됨을 피력
 - * AAAA 129 항은 UN이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 빈곤의 다면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측정체계를 개발할 것을 결의
- (결과) 솔하임 의장은 3개국 외교장관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상세 안전을 작성, 6월 정례회의에서 논의 실시
 - ※ 6월 정례회의 당시 다수 회원국은 최대수요국(countries most in need)에 대한 ODA 지원강화 공약 퇴색을 우려하며 수원국 판정기준 변경에 부정적 입장 표명

II. DAC 회원국 동향

1. 호주 원조 예산 삭감

- ◇ 호주 정부는 2016년 5월,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
 - 2016년 호주 원조예산은 38억 AUD로 전년 대비 5.5% 삭감되어, 2013년 보수 연정(자유당-국민당 연합) 집권 후 지속 삭감 추세
 -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촉진 중심으로의 국정운영기조 전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원조 포함) 긴축 단행 등이 주요 배경
- ◇ 호주 내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노동당은 '16년 7월 총선 공약으로 총 8억 AUD 규모의 원조예산 증액을 제시

- (현황) 호주 정부는 2016년 5월, 2016 회계연도 (7.1 ~ 6.31) 정부 예산안을 발표
 - 2016년 호주 원조예산은 38억 AUD로 전년 대비 5.5% 삭감되어, 2013년 이후 4년 연속 삭감 추세 기록
 - ※ 호주 원조예산은 최근 4년('13 ~ '16년) 간 총 24% 축소
 - 호주 정부는 2013년 DAC 동료평가(Peer Review) 당시 ODA/GNI 0.5% 공약을 2016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계속되는 원조예산 삭감으로 호주의 ODA/GNI는 0.33%('13년)에서 0.27%('15년)로 하락
 - 반면, 동 기간 정부 총예산은 9% 증액되어 총예산 대비 원조 비중 역시 1.3%('13년)에서 0.8%('16년)로 감소

< 2012년 이후 호주 원조예산 추이 >

단위 : 억 AUD, %

회계연도	원조예산 (A)		정부 총예산 (B)		총예산 대비 비중 (A/B)
	금 액	증감률(YoY)	금 액	증감률(YoY)	
2012 ~ 13년	50.5	4.7	382.6	1.2	1.3
2013 ~ 14년	50.3	△0.4	413.8	8.2	1.2
2014 ~ 15년	50.3	-	420.3	1.6	1.2
2015 ~ 16년	40.5	△19.5	431.5	2.7	0.9
2016 ~ 17년	38.2	△5.5	450.6	4.4	0.8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 작성

□ **(배경)** 2013년 보수 연정 집권 이후 원조예산 삭감 추세 지속 중

○ 2013년 보수 연정 (자유당-국민당 연합) 집권 후 국정운영기조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된 한편, 균형재정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문 (원조 포함) 긴축 단행

-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전통 주력 산업인 광산업이 침체하자, 호주 정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2013~19년 간 830억 AUD 규모의 인프라(도로, 항만 등) 건설 투자를 추진

※ 2013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국제 경쟁력 보고서>가 호주의 인프라 경쟁력이 148개 국 중 34위에 그치며, 인프라 공급 부족이 호주 내 기업경쟁을 저해하는 5대 요소임을 지적한 바, 호주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단행

○ 또한 외교정책 기조로 '경제 외교 (economic diplomacy)' 가 강조되면서*, 경제적 호혜관계가 높은 아시아·대양주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이 강화된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감소

- 2013년 9월, 독립원조기관이었던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이 외교통상부에 편입되면서 외교전략 - 원조정책 간 동조현상 (alignment) 심화*

* 2014년 6월, 줄리 비숍 (Julie Bishop) 외교통상부 장관은 '호주 개발원조의 新 패러다임' 연설을 통하여 호주의 개발원조가 기존의 수원 - 공여국 개념을 탈피하고, '경제적 동반자(economic partnership)' 개념을 수용하여 역내 경제성장 촉진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

□ **(결과)** 호주 내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노동당은 2016년 7월 총선 공약으로 원조예산 증액을 공약

○ 언론 및 시민사회 등은 호주 정부의 ODA 증액 공약 이행의지 미비로 인한 국제사회 위상 및 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비판론을 제기

- 줄리아 뉴튼 - 호즈 (Julia Newton - Howes) 케어인터네셔널 호주지부 (CARE Australia) 대표는 금번 원조예산 삭감조치를 호주의 국제 위상을 추락시킬 '도널드 트럼프의 방식 (Donald Trump approach)' 이라 혹평

○ 타냐 플리버섹 (Tanya Plibersek) 노동당 외교 대변인은 2016년 7월 총선 공약으로 총 8억 AUD의 원조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선언

- 2016년 원조예산 삭감분 복원 (2.2억 AUD), UN난민기구 (UNHCR) 앞 지원 (4.5억 AUD), 개발 NGO 지원금 (40백 만 AUD) 등이 증액안에 포함
- ※ *Seven News/ReachTEL* 여론조사 (5.27) 에 따르면, 노동당과 집권 보수 연정의 선호도가 52% 대 48%을 기록하는 등 총선 접전 예상

2. 프랑스 AFD – CDC 합병 백지화

- ◇ 佛 개발청(AFD)과 정책금융공사(CDC)의 합병 논의가 '15년 8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발표 이후 진행되었으나 백지화에 그침.
 - AFD - CDC 합병은 재정긴축 제약 하 CDC를 활용한 AFD 자본확충으로 新 개발목표 (SDGs, 기후변화 등) 이행재원을 확대하려는 시도였음.
 - 대통령 측과 AFD 등은 합병에 긍정적이었으나, 합병주체인 CDC를 포함하여 일부 정부 부처(경제부 및 외교부), NGO가 합병에 반대하면서 전면 백지화
- ◇ CDC와의 합병 무산으로 AFD의 대체재원 발굴이 주요 과제로 부상
 - 佛 정부의 지속적 원조규모 확대를 통한 新 개발의제 선도의지가 표명된 사례이며, 특히 AFD 유상차관이 주요이행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

- (현황) 佛 개발청 (AFD) 과 정책금융공사(CDC*)의 합병 논의가 2015년 8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발표 이후 진행되었으나 백지화에 그침.
 - * 佛 CDC는 자본금 280억 유로, 종업원 13만 여 명 규모의 대형 국영투자기관으로, 정책금융업무는 물론 부동산, 보험업, 사모펀드 (PEF)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 중
 - ※ 佛 CDC와 비교하여, 英 CDC(영연방개발회사)는 개발금융기관(DFI)으로서 지분투자·대출·보증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을 지원
- (배경) 佛 정부는 新 개발의제 선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개발원조 규모 확대를 강조하여 왔음.

- 2015년 8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AFD - CDC 협업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양 기관 협업시 독일 KfW처럼 풍부한 자본 및 역량을 가진 ‘공공투자은행’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SDGs,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체결 이후 AFD의 역할강화 및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여 왔으며, CDC 자금을 활용한 AFD 자본확충이 개발재원 (Financing for development) 확대에 결정적임을 시사
- 이후 2016년 1월, 올랑드 대통령이 CDC의 AFD 출자 혹은 기관 통합 (Integration)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합병 논의가 본격화됨
 - 올랑드 대통령은 2016년 1월, CDC 창립 50주년 행사 축사를 통하여 CDC의 국제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AFD 확대 방안 (2020년까지 자본금 3배 증자 및 지원규모 50% 확대)을 발표
- (찬성 요지) 대통령 측은 AFD 앞 직접출자가 어려운 긴축재정 여건 하 CDC를 활용한 AFD 자본확충으로 대규모 개발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병 추진
- AFD는 법률상 개발은행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제약 보유
 - 한편, 긴축정책 단행으로 佛 정부의 AFD 앞 직접출자 예산 반영이 어려워지자, CDC 재원을 활용한 AFD 재원확충에 집중하기 시작
 - ※ 프랑스는 최근 5년 ('11 ~ '15년) 평균성장률이 0.88%에 그치는 등 장기 경기침체 중이며, 긴축정책 실시에 따라 대외원조 역시 ODA/GNI 기준 0.50% ('10년) 에서 0.37% ('15년) 로 축소되었음.
 - AFD 내부에서도 CDC를 통한 대규모 재원확충을 환영하는 등 합병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인 CDC와 합병 시, BASEL III 등 은행 건전성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개발원조 정책 시행의 자율성 강화에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

- **(반대 요지)** 한편, 합병주체인 CDC와 일부 정부 부처 (경제부 및 외교부), 일부 NGO 등은 양 기관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
 - CD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DC 감독위원회는 2015년 11월 회의에서, AFD 지원 시 감당해야 할 추가재원소요·리스크 대비 실익이 적음을 밝히며 합병 반대의사 표명
 - 한편, 경제부·외교부는 AFD - CDC 합병 시 경제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합병에 반대
 - 일부 NGO는 AFD - CDC 합병 시 유상차관 (loan) 비중이 무상원조 대비 급증하는 개발원조의 금융화 (financialization) 현상 발생 가능성을 우려
 - 이들 NGO는 對 빈곤국 원조의 대부분이 긴급원조 (백신공급, 식량지원, 긴급구호 등)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위 사업의 집행자금인 grant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佛 정부는 이를 해명하고자 ‘양 기관 합병 후 유상차관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상차관 또한 2020년까지 3.7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음.
- **(결과)** 2016년 3월, AFD의 CEO인 안 뽀감(Anne Paugam)을 통하여 합병 논의 백지화가 공식 확인됨.
 - AFD - CDC 합병, AFD의 CDC 자회사 편입 등 합병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모든 방안들이 백지화되었고, 양 기관 지배·운영 구조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
 - 단, 양 기관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내용 협의 중
 - 양 기관 합병 무산으로 AFD 재원 확충을 위한 대체재원 발굴이 佛 정부의 향후 주요 과제로 부상
- **(시사점)** AFD - CDC 합병 시도는 실패에 그쳤으나, 佛 정부가 개발원조 규모 확대를 통한 新 개발의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관찰 가능
 - 특히, 佛 정부가 AFD 차관 역량 (lending capacity) 확대를 주요 이행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프로젝트 추진 현황

- ◇ AIIB는 2016년 1월 출범 후 제도 구축·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MDB와의 업무협약 및 협조융자사업 추진에 주력 중
 - 신생기구인 AIIB의 특성 고려 시, 사업역량 한계 (자원·경험·전문인력 부족 등) 극복, 투자효율 및 사업경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됨.
 - ◇ AIIB는 운영 초기 협조융자 위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편, 단독사업수행능력 배양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됨.
 - 제1차 연차총회 (2016년 6월) 종료 후 연간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수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범정부 방안 모색 중
 - AIIB 내 높은 위상*, 아시아 인프라 시장 전문성, 문화·지리적 친숙도 등 우리나라의 회원국 내 비교우위 적극 활용 필요
- * 57개 회원국 중 지분을 5위 (3.81%)이며, 부총재직·상임이사직 수임 중

- **(현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은 출범 (2016. 01. 16) 이후 제도구축 및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MDB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협조융자사업 추진에 주력
 -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 (EIB) 등 4개 주요 MDB와 업무협약을 체결
 -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협조융자사업 발굴·수행, 정례회담 개최, 정보공유 등이 포함
 - AIIB 이사회는 제 1차 연차총회(2016. 6. 25 - 26, 베이징)에서 MDB 협조융자사업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5억 USD 규모의 차관 지원을 승인 [참고]
 - 개별 사업의 경우 일대일로 (一帶一路),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 (CAREC)* 경제회랑 (Economic Corridor) 사업 등 中 정치·경제 이익에 기여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경향
- *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배경)** 신생기구인 AIIB의 특성 고려 시, 선진 MDB와의 협력 심화를 통하여 사업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효율 및 사업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로 판단됨.

- 협조융자사업의 경우 선진 MDB가 주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 MDB의 정책 및 운영절차*를 준용하여 사업을 계획·운영
 - * 조달, 사회환경영향평가(safeguard) 등 사업운영과정 전반
- 자본금이 부족한 설립 초기 특성상 협조융자 위주 사업 진행시 투자리스크 경감 및 재무건전성 확보 가능
- 주요 MDB의 선진 운영체제와 풍부한 사업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가용 인프라·사업경험·전문인력 부족 등을 보완하려는 의도

□ (전망) AIIB는 운영 초기 MDB 및 주요 원조기관 협조융자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편, 단독사업수행능력 배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AIIB 이사회는 2016년 1월, 연간사업계획 최종승인 당시 정책기반 및 운영체제 완성, 경영진·전문인력 확충,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확립 등을 주요 당면과제로 서술
- 제1차 연차총회 (2016. 6. 25 - 26, 베이징) 종료 후 연간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수행이 본격화될 전망

< AIIB 연간사업목표 (2016-2018)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 발굴	30건	30 ~ 40건	40 ~ 50건
사업 승인	5 ~ 10건	10 ~ 20건	15 ~ 25건
지원 규모	5 ~ 12억 USD	15 ~ 25억 USD	25 ~ 35억 USD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16),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제1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서

- 우리 정부는 AIIB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방안 모색 중
 - ※ 제2차 AIIB 연차총회(2017.6.16 - 18, 제주)를 유치했으며, 이외에도 AIIB 연구소 유치, '코리아 프로그램' 설치 (한국-AIB 신탁기금, 2016년 100억 원) 등 추진 중
 - 57개 회원국 중 5위 지분율(3.81%) 보유국이며, 상임이사직 (1석) 및 부총재직(Chief Risk Officer, CRO)을 수입 중인 우리나라의 AIIB 내 높은 위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이외에도 對 아시아 인프라 시장 전문성, 문화·지리적 친숙도 등 우리나라의 회원국 내 비교우위 적극 활용이 요구됨.

[참고]

AIIB 추진 프로젝트 (2016년 6월 기준)

1.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사업 (ADB - DFID 협조용자)			
* ADB 정책 및 운영절차 준용 (조달, 사회환경영향평가 (safeguard) 등)			
차주	▪ 파키스탄 정부	사업 규모	2.7억 USD
시행 기관	▪ 파키스탄 국가도로청	지원 규모	▪ ADB : 1억 USD ▪ AIIB : 1억 USD ▪ DFID : 34백만 USD
사업 내용	▪ M-4 고속도로 개설 (편자브주 소르코트 시 - 카네왈 시, 64km)		
2. 타지키스탄 도로 개선 사업 (EBRD 협조용자)			
* EBRD 정책 및 운영절차 준용 (조달, 사회환경영향평가 (safeguard) 등)			
차주	▪ 타지키스탄 정부	총 사업비	1억 USD
시행 기관	▪ 타지키스탄 교통부	지원 규모	▪ EBRD : 27.5백만 USD ▪ AIIB : 27.5백만 USD
사업 내용	▪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 경제회랑 타지키스탄 구간 개선 (두산베 - 우즈벡 국경, 5km)		
3. 방글라데시 전력 송·배전체계 개선·확장 사업			
차주	▪ 방글라데시 재무부	총 사업비	2.6억 USD
시행 기관	▪ 방글라데시 지방발전위원회 ▪ 다카전력공사 (DESCO)	지원 규모	▪ AIIB : 1.6억 USD
사업 내용	▪ 농촌지역 2.5백만 명 신규 전력보급 ▪ 변전소 개선, 다카 북부 전선 지하화		
4. 인도네시아 빈민지역 환경개선 사업 (세계은행 협조용자)			
* 세계은행 정책 및 운영절차 준용 (조달, 사회환경영향평가 (safeguard) 등)			
차주	▪ 인도네시아 정부	총 사업비	17.4억 USD
시행 기관	▪ 인니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지원 규모	▪ 세계은행 : 2.1억 USD ▪ AIIB : 2.1억 USD
사업 내용	▪ 중부·동부 154개 도시 빈민지역 환경개선 - 시행기관 역량강화·정책자문·협력구축 지원 - 도시인프라·서비스 구축사업(상·하수, 위생시설 구축, 통행로 개설 등) 지원		

출처 : AIIB 홈페이지, <http://www.aiib.org>

III. OECD DAC 3/4분기 일정



타이드워터(Tidewater) 회의



거버넌스네트워크 (GOVNET)



체코 동료평가 (Peer Review)
